

운정동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 '산넘어 산'

2순위 업체 반발 이어 1순위 업체 입찰자격 분쟁 소지

공사지연·줄소송 우려 ... 광주시, 기재부에 유권해석 의뢰

광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이 '산 넘어 산'을 만났다. 업체 공모에서 2순위 선정업체의 반발로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데다 1순위 업체의 입찰자격을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새로운 압축을 맞았다. 사업지연은 물론 자칫 '줄소송'도 우려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민간투자 공모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7만9000여㎡의 매립장에 민자 262억원을 유치,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최근 이 사업과 관련, 공모를 거쳐 1, 2순위 업체를 선정했으나 2순위 업체는 '1

순위 업체가 투자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반발, 광주지법에 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 여파로 지난해부터 시작, 2017년 완공해야 할 사업의 발이 묶여있다.

최근에는 1순위 업체에도 새롭게 판단 해설 문제가 생겼다. 해당 업체가 '조달청에서 내린 입찰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광주시가 해당 업체의 입찰자격 유무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해당업체의 입찰자격은 판결이 확정된 12월11일부터 70여일간 정지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로서 부담은, 이 기간 동안 추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1순위 업체의 입찰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문제로 간단치 않다.

시가 이 기간에 본 계약을 체결하면 표면상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재를 받는 업체와 계약하는 셈이 된다. 해당 업체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소송 제기 등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시는 현재 고문변호사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겨 1순위 업체의 자격 유무를 살피기 위해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지만, 탈락한 2순위 업체가 반발하자 자체 감사를 벌여 한달 남짓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다.

탈락한 2순위 업체는 선정된 업체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충족시키는 지역 계약법에 따른 투자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업체는 곧바로 광주지법에 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으며 선정절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은 최근 기각됐다. 해당 건에 대한 본안 재판은 오는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시에 국책사업인 만큼 연내 착공을 요청한 바 있어 공사지연에 따른 부채간 갈등도 우려된다.

매립면적 26만2000㎡에 매립용량 4369㎡에 달하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3년부터 매립에 들어가 2004년 매립이 완료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친환경디자인박람회 성공 개최위해

전남도-22개 시·군 상생 협력키로

경관·디자인 담당과장 회의

전남도가 '2016년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22개 시·군과 손잡고 상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3일 시·군 경관, 디자인,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2016년 경관디자인 분야 업무 계획을 설명했다. 디자인 분야 업무 계획을 설명했다. 디자인 분야 업무 계획 수립하는 등 다양한 시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는 오는 5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나주 소재 전남농업기술원에서 펼쳐지는 2016 세계친환경 디자인박람회 실행계획을 소개하고, 입

장권 사전 예매 및 문화의 날 행사 적극 참여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욱 전남도 경관디자인과장은 "오는 5월 개최되는 2016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경관 및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경관·디자인·옥외광고물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오전 11시 31분 전담대를 방문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조망하고, 영산강 황포돛배에 올라 영산강 경관을 살펴봤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회 '족지예산' 지역보다 이익집단 2배 배정"

배석주씨 박사는문서 밝혀

영남권 44%, 수도권 20%

매년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끼어드는 이른바 '족지예산'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사업보다 특정기관 등 이익집단에 배 이상 더 편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로 영남권이 족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고 봐도 수도권 통계로 확인됐다.

3일 한국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배석주(45)씨는 박사학위 논문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족지 예산에 관한 연구'에서 2012~2015회계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의 족지 예산을 분석했다.

4년간 족지예산 4조1000억원 중 지역예산은 6870억원(16.75%), 기관예산은 1조2938억원(31.55%), 전국예산은 2조1204억원(51.70%)으로 집계됐

다.

족지예산을 17개 시·도 관련 예산으로 추리면 817건에 1조2539억원이었다. 이 중 영남권이 5478억원(348건)으로 4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도권 2521억원(180건, 20.1%), 충청권 2483억원(135건, 19.8%), 호남권 2057억원(166건, 16.4%) 등 순이었다.

논문은 "영남권이 인구가 집중돼 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것이라고 봐도 수도권에 비해서도 배 이상 많은 것은 집권당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시가 76건에 1654억원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해 1위를 달렸다. 경기도 1425억원(95건·11.4%), 경북 1229억원(107건·9.8%)이 각각 2, 3위로 뒤따랐고 충북 925억원(40건·7.4%), 전남 876억원(74건·7.0%)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청년의 힘에서"... 2기 광주청년위 출범

광주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2기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정책 민관(民官) 합치 소통창구인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빛가람 취업 멘토링, 청년상인 육성 등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장에 반영했다.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정책 개발, 청년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 조례도 지난해 말 제정했다.

올해 법정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청년위원회에는 최근 공모한 대학생, 청년CEO, 취업자, 문화 및 시민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47명(남 33, 여 14)이 참여했다. 청년위원 임기는 1년이며 일자리, 문화, 복지, 소통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눈높이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국내 다른 지자체 청년위원회와 교류, 해외 청년단체와 연대도 이끌며 연말에는 광주시청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간한다. 오는 7월 광주청년축제 기간에 대구시청년위원회가 광주를 방문하고, 10월 대구청년주간에 광주시청년위원회가 대구를 방문하는 등 달빛동맹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주민세 납부기한

11일서 16일로 5일 연장

전남도가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의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11일에서 16일로 5일 연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일 "올해 1월분 주민세 종업원 원본의 신고·납부 기한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기업인)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납기를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 납세 대상자는 종업원 월 평균 급여 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다. 2015년까지는 종업원 수(50인 초과)를 기준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월 평균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 평균 급여가 1억3500만원 이하인 사업주는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납세 대상 사업주는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 관할 시군에 급여 지급 다음달 10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유례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료 정비 및 세금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운송비 확 줄여요"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사 의회동 앞에서 열린 ' 시내버스 친환경 연료절감장치 부착식'에 참여한 유장현 시장 등 참석자들이 시내버스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연료절감장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에 연료절감장치 단다

100대 시범... 5월 전체 확대

교통사고 예방·연료비 절감

광주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연료절감장치가 장착된다. 이 장치는 버스의 속도와 운행 상태를 감지하고 변속 전후의 엔진효율을 계산해 최적의 변속시점을 알려주고 급출발과 급제동 등 연료 과소비 운전 행태를 개선할 수 있다. 광주지역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되면 안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연간 20억~30억원

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준공영제 개선안의 하나로 제시됐으며 이달 중에 100대를 장착해 1개월간 시범 운행한 뒤 5월부터 전체 시내버스(1천41대)에 도입할 계획이다. 제조업체가 무상으로 설치한 후 연료비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지난해 광주지역 시내버스 연료비는 335억원이 늘었다. 이를 기준으로 6~10%의 연료를 절감하면 연간 20억~30억원의 연료비가 절감된다. 광주시, 버스회

사, 설치업체가 각 50%, 12%, 38%씩 배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연료절감장치 도입과 함께 노선 개편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표준준비제를 병행해 연료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3일 "운송비 절감과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라도 연료절감장치 도입은 꼭 필요하다"며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체와 운전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버스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에 회사가 맡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여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과목 : 스미일 / 라석 / 라석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 (062)368-1700